

투데이 칼럼

발등에 떨어진 불, '지방소멸'

지방 소멸은 답이 없다고 한다. 누군가는 적음이 최선이라고 서슴없이 말하기도 한다. 좀처럼 희망을 찾기가 쉽지 않다. 그렇지만 소멸 위기를 극복한 지역은 분명히 존재하고 그곳에서 희망을 발견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지역 부활의 희망 안에서가 될 묘수는 없는 걸까?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말이 있다.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대변하는 말로 예나 지금이나 서울로 향하는 발길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나 요즘은 수도권에 몰수록 지방이 가라앉는 반비례 현상이 부쩍 가속화되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서울을 중심으로 인구와 정보, 각종 인프라들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전체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서울·인천·경기에 인구의 절반 이상이 모여 살면서 경제, 문화, 교육, 의료 등 모든 것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다.

수도권으로 인구가 몰리는 이유는 학교와 병원, 기업, 문화시설 등 생활에 필요한 모든 인프라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국은 빠르게 늙어가고 있고 점점 지방소멸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폐교 빈집, 60세 청년희망, 경운기 팝니다. 장례식이 동네 이벤트...' 저출산과 고령화, 수도권 집중이라는 두 축이 만들어낸 지방소멸은 출생률이 감소하고 젊은이들이 지역을 떠나는 상황에서 남은 노인들이 사라지면 자연스럽게 도태될 것이라는 위협적 절망감으로 다가온다.

이를 극복하고자 정부는 올해 전국 228개 지자체 중 89개 도시를 소멸지역으로, 18개 도시를 관심지역으로 지정해 매년 1조원씩 10년간 10조원을 투입할 계획이지만 실효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들려온다.

지역경제가 선순환하고 지방소

멸을 방지할 변수는 없는 걸까? 이익이 기대되지 않으면 투자도 없고, 먹고 살 수 없으면 사람도 발길을 주지 않는 것이 자본주의 경제의 당연한 생리다. 따라서 저출산, 고령화, 인구감소 등은 지역경제와 결부시켜 풀어야 할 공통분모로 지방에도 좋은 일거리를 많이 만들어내야 소멸을 막을 수 있다.

지방과 수도권간의 일자리 불균형은 지방을 소멸위기로 몰아가는 가장 큰 이유이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소멸위기의 지역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일자리, 인프라, 관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하나의 자족도시를 이뤄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견해다.

따라서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기업도시가 꾸준한 대안으로 떠오른다.

고향사랑 기부금제 또한 극심한 인구유출에 시달리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가문의 단비 같은 존재다.

지방소멸을 극복할 새로운 대안으로의 가능성만 아니라 태풍이나 지진 등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고향사랑기부금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등 활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이다. 주거주지, 주거주지를 허용하는 유연 주소제 도입도 필요해 보인다. 이와 함께 관계인구의 중요성도 부각된다. 중앙집권적 거버넌스 구조에서 지방분권형 구조로의 변화도 필요하다.

이제 지방소멸의 위기는 더 이상 미래가 아닌 지금 당장에 극복해야 할 국가적 과제이다. 결국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은 지방소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힘의 벡터를 모아 창조적 공존으로 나아가는 장기적인 전략

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기대와 소망을 담아 지원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역경제의 선순환과 지방의 부활을 일리는 신호탄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

황인홍

무주군수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은행 ATM기 이용하는 헤르손 주민들



2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헤르손 시내의 한 은행 안에서 주민들이 현금 자동인출기(ATM)를 이용하고 있다.

지진으로 무너진 집 바라보는 피해 주민들



22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서자바주 치안주르 주민들이 전날 발생한 지진으로 무너진 집들을 바라보고 있다. 현지 당국은 규모 5.6의 지진으로 지금까지 최소 162명이 숨졌으며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사설

2차전지 공급망 다변화가 핵심

전기차가 미래 산업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생산하는 전지 산업도 함께 성장하고 있다. 이 분야에서 한국이 제2의 반도체 산업이 될 거라는 기대가 있다.

국내 한 대기업은 아르헨티나 살타주 소금 호수에서 전기차의 배터리 2차 전지 필수 원료인 리튬을 추출하고 있다. 이 대기업은 추출한 리튬을 국내로 가져와 가공하는 공정을 서두르고 있다.

문제는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한국 등의 국가에서 가공한 광물이 40%를 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레이트 레이크를 주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국내 가공이 불가피해졌다.

반면 국내 기업들의 리튬 가공에 대한 중국 의존도는 무려 81%나 된다. 공급망 다변화 없이는 전기차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경쟁력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

유럽마저 중국 원자재 의존도를 축소하는 방향의 원자재 법 제정을 검토 중이어서 상황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국내 주요 배터리 업체들은 호주, 캐나다 등으로 보폭을 넓히고 있다.

하지만 해외 자원 확보는 막대한 자금이 투자되고, 자원 개발 실패 위험이 크다. 뿐만 아니라 프로젝트를 추진하려면 해당 국가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업계가 해외 광물 사업에 나설 수 있도록 배려하고 광물 개발과 투자에 5년간 3조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내 배터리 3사가 지난해 말까지 확보한 2차 전지 수주 물량은 560조 원이다. 시장 규모는 앞으로 10년간 10배 가까이 성장할 전망이다.

2차 전지가 우리에게 제2의 반도체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민간의 안정적인 광물 확보를 위한 프로젝트 발과 자금, 그리고 컨설팅 등 지원에 적극 나서기 바란다.

올해 중부세 확정 의미

올해 중부세 고지 금액이 확정됐다.

중부세 내는 사람은 30만 명 가까이 늘어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다. 다만 1주택자도 다주택자도, 1인당 평균 중부세 부담 금액은 줄었다.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 세금은 모두 122만 명에게 4조 1,000억 원이 고지됐다. 지난해보다 28만 9천 명이 늘었다. 지난해 고지세액 5조 7천억 원보다는 1조 6천억 원이 줄어들었다.

인원은 늘고 전체 고지 금액이 줄면서 1인당 납세액은 크게 줄었다. 1인당 고지세액은 336만 3천 원으로, 지난해 결정세액 대비 평균 137만 원 감소했다.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고지 인원은 23만 명으로 늘었지만, 1인당 고지세액은 108만 6천 원으로 지난해 결정세액보다 44만 원가량 줄었다.

다주택자와 법인 중부세는 모두 3조 4천억 원으로 전체 고

지역의 83%를 차지했다. 중부세 대부분을 이들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한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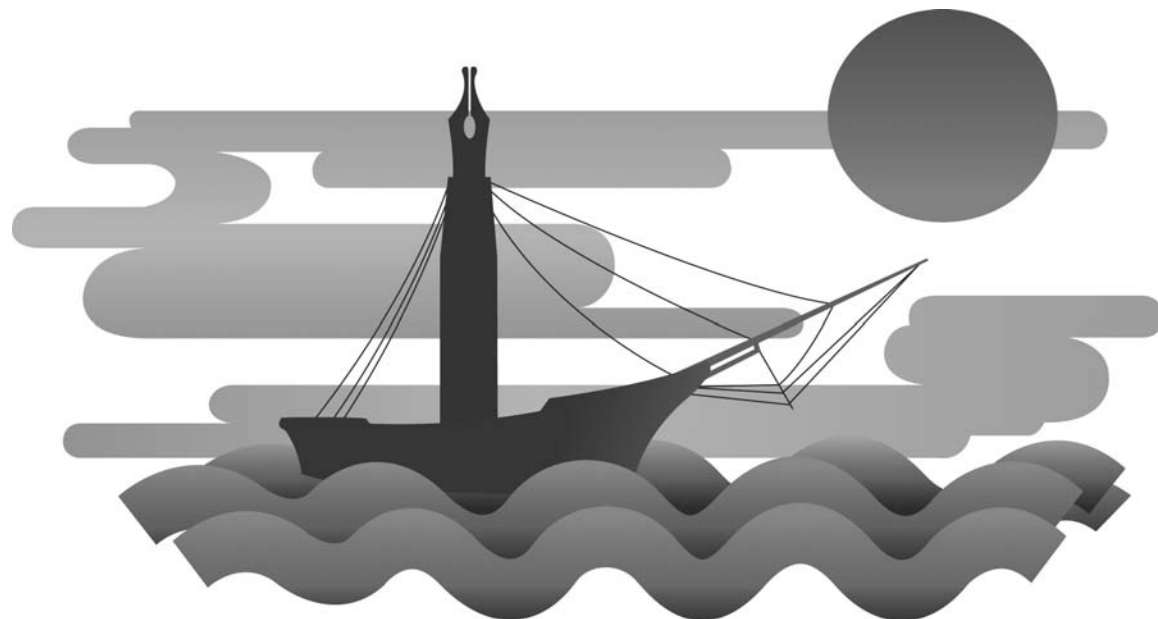
정부는 올해 중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60%로 낮추고 일시적 2주택자 등에 대한 혜택 등을 제 공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9조 원 수준으로 예상되던 주택분 중부세를 4조 천억 원으로 5조 원 정도 줄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중부세가 지나치게 많은 사람에게 부과되고 부담도 커지고 있다며, 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정상화시키기 위한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현재 17년째 그대로인 기본공제금액을 9억 원으로 상향하고, 다주택자 중과 세율을 폐지하는 등의 중부세 개편안을 발표했다.

중부세 고지 금액은 국제정 혼재이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향후 이의신청이나 비과세 분을 반영해 결정세액이 확정된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